

# “정의당 ‘양 특검’ 신속처리 결단을”

### 민주당 ‘50억 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상정에 협조 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50억클럽’ 법사위 통과 못하면 패스트트랙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2일 “정의당도 양 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의 본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결단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이 이달 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결단을 늦추면 가장 8개월이 소요되는 신속처리 안건 절차를 고려할 때 특검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두차례나 파행시킨 여당은 (어제) 소위에선 2시간 넘게 시간을 끌더니 의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국민 여론에 밀려 마지막에 법안 상정까지 했지만, 이는 보여주기용 시간 끌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공짜 묶어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촉구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상임위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한다”며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특검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전체회의에서도 협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 안에 법안을 공짜 묶어두고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남은 국회 절차를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 소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필요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檢, 2021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수사

### 이정근 현대전화 녹취록 확보...윤관석 “진술에만 의존한 기획수사”

검찰이 2021년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최소 수천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 이 오간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2일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의 국회·인천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래구 한국감사협회 회장 자택, 민주당 관계자 관련 장소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전당대회 결과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윤 의원은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고, 송 대표는 선출 후 윤 의원을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 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에서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원 규모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음에 나오는 돈 봉투 외에도 다양한 전달 경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범위를 넓혔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이 송영길 캠프에서 일했던 만큼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구의원들은 12일 오후 광주시의회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 여의도 브리핑

### ‘미세먼지 저감’ 적용대상에 석탄발전소 포함

김희재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재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2050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중 석탄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조명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더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광주시·구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규탄

### 79명 시의회 앞 결집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구의원들은 12일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출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 22명과 구의원 57명 등 79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굴욕적 친일 외교로 국민 자존심을 깎은 것도 모자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

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성 물질이 뒤섞인 오염수에 대해 정화 처리 과정과 상세한 정보 공개 없이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일본을 믿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모호한 언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 뻔한 상황에 정부가 비

겁한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세대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에 ▲오염수 방류 계획 즉각 철회와 우리나라, 주변국이 참여한 안전성 검증 ▲방사성 오염수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상세한 정보 공개 ▲정부 주도로 국제사회와 연대한 적극 대응과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MBK파트너스, BHC 가맹점주 상생안 발표

### 김경만 의원, 지난해 국감 결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비례) 국회의원은 12일 “bhc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결국 bhc치킨 가맹점주에 대한 상생안을 내놨다. bhc그룹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사적으로 ESG 경영을 공식 시작한다며, 첫 실천 방안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가맹점 지원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 78억원을 배정해 bhc치킨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현금 지원하는 방안이다”며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을 때마다 내놓았던 면피용 또는 생색내기식의 상생

안이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조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의 윤종하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이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가맹점주와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bhc의 상생안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MBK파트너스측이 상생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면서도 상생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결국 수 개월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번의 상생안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